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실시 “文대통령 호남 공약 점검 계기 삼아야”

광주형 일자리·광주 군공항 이전·문화수도 등 주목
목표~제주해저터널도 ... 민주·국민의당 역할 관심

다음 주 24~25일 실시되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공약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돼야 하겠지만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수장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했던 호남 공약에 대한 입장과 추진 방안 등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총리의 국가 정책 및 사업에 입장 표명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후보자가 전남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호남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어 청문회를 통해 호남의 미래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지지부진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입장이 주목된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고 이용섭 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광주형 일자리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도 '뜨거운 감자'다. 문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에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전남지사 시절, 광주 군 공항의 전남 무안 공항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었다. 이 후보자가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 부지 활용 공약도 구체화 될 전망이다. 여기에 광주 문화수도 활성화를 위한 문화산업 육성성에 대한 그림도 나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아니지만 목표~제주해저터널 건설이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이 후보자가 지사 재직시절 해저터널 건설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호남고속철(KTX) 2단계 사업과 무안국제공항 경우 노선 문제도 문재인 정부 초기 가닥이 지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빚고 있는 한전 공대 설립 문제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지역 대학의 공대는 물론 광주 과기원 등을 고려, 공대보

다는 전국적 R&D 및 벤처기업 인큐베이션 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현안도 점검해야 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호남 인사 중용 원칙도 다시 확인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가 내각을 모두 제청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호남 인사 중용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 변방으로 밀렸던 각 부처 호남 인사들의 원대 복귀와 핵심 보직 이동 등도 이 후보자가 챙겨야 할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보다 전략적으로 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회 뇌물 사건 연루에 청문위원 접촉설

부적합 경력·청렴성 질타
인사 검증 통과할 지 주목

광주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인 박중배(59) 한국산업인력공단 위촉 산업현장 교수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준비 부족과 부적합한 경력, 공모 순위에 대한 의혹 등이 불거졌다. 또한, 뇌물 사건 연루 의혹과 청문위원 사전 접촉설, 청렴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발언으로 구설까지 오르면서 인사검증 문턱을 넘을 지 주목된다. 심철의(국민·서구) 광주시의원은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9년 도로공사 입찰 과정에서 설계평가 위원 이던 모 국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에게 2000만원이 제공된 의혹과 관련, 해당 교수가 비록 무죄판결은 받았지만 당시 박 후보자가 돈을 직접 전달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전달한 것은 맞지만 서류봉투로만 알았고 돈이 든 사실은 재판이 끝난 후에야 알았다. 모두 소명됐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뇌물수수에 대해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났지만 박 후보자의 돈 봉투 전달은 사실로 확인된 것 아니냐”며 “공공기관 수장 후보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기업 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점, 직무계획과 제출서류의 오류, 도시공사의 낮은 청렴도, 배우자의 잦은 고이을 대출, 청문위원 사전접촉설과 외부정탁, 도시공사 성과연봉제 문제와 관련한 질의와 질타도 이어졌다. 공사 청렴도 문제와 관련해 “내부 청렴도를 높일 묘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렴은 최우선 과제다. 업무효율성과 배치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 청렴정책은 직원들을 제재하고 제어하는 것이고 (청렴대상인)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조직원들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주는 것”이라고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사장 후보에 선정된 이후 인사청문회 위원들을 개별 접촉하려고 했던 행동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 청문위원은 “(박 후보자를) 잘 부탁한다”는 전화를 외부로부터 여러 통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1차 공모에서 탈락했다가 2차에서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된 점, 토목공학 분야에서만 경력이 있고 공기업 운영 책임자로서는 경험이 없는 점도 논란이 됐다. 한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2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채택한 뒤 23일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광주시에 결과보고서를 송부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李총리 후보자 지명에 전남지사 별정직 비서 11명 면직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남지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전남지사 비서관·비서 11명도 지난 12일자 면직돼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별정직 공무원들은 지사 퇴임과 함께 면직됐지만, 비서실장과 특별 보좌관(특보) 직은 현행대로 운용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12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을 보좌하려고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에 임용된 경우 임용 당시 단체장 또는 의장이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되도록 했다. 면직된 11명은 이 후보자가 전남지사직을 계속 수행했다면 지방선거 후 새 지사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7월 1일 전까지 1년 이상 재직이 최소한 보장되는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가 지사 재선, 3선에 성공한다면 그만큼 근무 기간 연장을 기대할 수도 있었다. 측근에서 보좌하던 지사의 영전은 반길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게 된 셈이다. 전남도는 4급(서기관) 공무원이 맡는 비서실장직은 김갑섭 행정부지사가 이끄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유지하기로 했다. 민원 처리와 권한대행 보좌 등 역할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무·여성·투자유치·문화관광·해양수산·농업·남북교류 등 6개 분야 특별보좌관 15명도 보좌 역할을 이어간다. 이들은 엄밀히 민간인 신분으로 도정 전반을 보좌하는 역할인 만큼 지사의 거취와 무관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윤현석기자chadol@



브리핑하는 靑대변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중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임명과 관련한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취약계층 구직자 중기 취업 지원서비스

150명에 1인당 최대 10만원 제공
전남도가 18일부터 취약계층 구직자의 사회 진출을 적극 돕기 위해 면접 비용과 맞춤형 면접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채용 면접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면접지원서비스는 취업 준비 중인 사회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서민지원이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이다. 전남지역 중소기업에 취업을 바라는 구직자 150명에게 1인당 최대 10만원의 면접 비용과 인사 지원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단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3단계 참여자로 면접 지원을 받는 구직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바라는 구직자는 신청서, 취약계층 확인서류 등을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장성, 담양, 화순 일자리센터와 전남일자리종합센터에 제출하면 간단한 적격심사를 거쳐 면접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여럿이 살아야 더 건강하고 행복?

1인 가구 행복지수 6.29, 다인 가구는 6.99점

광주복지재단 분석

광주시민 행복지수 6.89점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행복지수가 여럿이 함께 사는 다인(多人)가구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복지재단은 17일 광주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 1인 가구를 분석한 결과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29점으로 다인 가구 행복지수 6.99점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밝혔다. 광주시민 평균 행복지수 6.89점과 비교해도 매우 낮았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평가도 '나쁘다'거나 '매우 나쁘다'고 답한 비율이 26%로 다인가구나 전체 평균 12.3%,

15.3%와 비교해 훨씬 높았다. 1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명 중 1명(49.8%)이 100만원 미만이었으며 가구 지출비중도 66.7%가 1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돈벌이가 여의치 않은 만큼 씀씀이도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1인 가구 비율도 급증해 2015년 기준 28.8%로 10가구 중 3가구에 달했다. 1990년 8.1%였던 점을 고려하면 25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2005년에는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55.6%로 남성(44.4%)보다 높았으나 2015년에는 49.1%와 50.9%로 역전됐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원 최희석 · 정행진 · 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